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 편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국민의당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어제와 싸우지 않으면 내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국민 편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국민의당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와 과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낡은 체제와 결별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을 깨뜨리고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재기의 기회마저 빼앗긴 사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20대 총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장입니다. 국민의당은 공약집에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절실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만이 국민들을 웃게 만들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정치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의 길을 가야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이 도전을 포기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과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노인이 겪는 절망은 앞으로 중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빈곤 제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회가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기는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공정한 언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공약은 과정이며 약속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여건 아래 더 나은 약속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토론하며 발전시키겠습니다. 더 많은 제안을 받고 더 깊은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담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약속'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이 약속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 걸음을 막 시작한 국민의당 앞에는 미래와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 채워 주시기를 청합니다.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 천정배

미래 · 혁신 · 정도

12대 목표

1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2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3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4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5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6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7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8 사교육비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9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11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2 공정 언론과 미디어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1.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2. 제값받기

3. 갑질방지

4. 패자부활

5. 활기찬 자영업자

6. 서민권익 강화

7. 공정한 정치

8. 투명한 정치

9. 의료비 부담 완화

10. 복지 사각지대 해소

11. 인구 5천만 프로젝트

12.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13. 건강한 어르신

14. 삶이 편한 어르신

15. 청년일자리 지원

16. 청년학비 경감

17. 청년권익 보호

18. 비정규직 권익 보호

19. 일자리 창출

20. 공교육 정상화

21. 사회적 약자의 기회확대

22. 창의교육 실현

23.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24. 당당히 일하는 여성

25. 당당히 맞서는 여성

26. 당당히 누리는 여성

27. 장애인이 자립하는 사회

28. 안전한 먹거리

29.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30. 안전한 환경

31. 도시와 농촌의 상생

32. 농·수·축산업인의 복지 강화

33. 언론의 공정성 확보

34. 미디어 복지시대

목차

01장.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011
- 실천과제 2. 제값받기 018
- 실천과제 3. 갑질방지 021
- 실천과제 4. 패자부활 023

02장.
**자영업자·서민 /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활기찬 자영업자 027
- 실천과제 2. 서민권익 강화 030

03장.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공정한 정치 035
- 실천과제 2. 투명한 정치 038

04장.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의료비 부담 완화 041
- 실천과제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045
- 실천과제 3. 인구 5천만 프로젝트 048

05장.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055
- 실천과제 2. 건강한 어르신 059
- 실천과제 3. 삶이 편한 어르신 062

06장.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 실천과제 1. 청년일자리 지원 067
- 실천과제 2. 청년학비 경감 071
- 실천과제 3. 청년권익 보호 074

07장.
**노동·일자리 /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
국의 미래입니다.**

- 실천과제 1. 비정규직 권익 보호 081
- 실천과제 2. 일자리 창출 088

08장.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 실천과제 1. 공교육 정상화 093
- 실천과제 2. 사회적 약자의 기회확대 095
- 실천과제 3. 창의교육 실현 097
- 실천과제 4.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099

09장.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당당히 일하는 여성 105
- 실천과제 2. 당당히 맞서는 여성 109
- 실천과제 3. 당당히 누리는 여성 112
- 실천과제 4. 장애인이 자립하는 사회 115

10장.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안전한 먹거리 123
- 실천과제 2.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127
- 실천과제 3. 안전한 환경 130

11장.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도시와 농촌의 상생 135
- 실천과제 2. 농·수·축산업인의 복지 강화 140

12장.
방송·통신 / 공정 언론과 미디어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언론의 공정성 확보 145
- 실천과제 2. 미디어 복지시대 146

| 공약 예산 추계 | 150



01장

경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
- 실천과제 2. 제값받기 ○
- 실천과제 3. 갑질방지 ○
- 실천과제 4. 패자부활 ○

01장. 경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미래형 신성장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듭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IT산업이 성장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집중 투자
- 국가 R&D 투자 조정을 통해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 기반 구축
- 신성장산업센터 설립 및 기금 조성
- 벤처투자환경 개선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 혁신과 융합의 산업기반 구축
- 벤처투자환경 개선

M&A 플랫폼을 도입하여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투자회수를 원활하게 하여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개선방안

- M&A 전문 중개기관(M&A 플랫폼)을 도입하여 M&A 대상 기업 간 정보격차 해소
- 민간주도 원칙으로 기존의 M&A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기술거래 및 기업 M&A 중개, 대·중 소기업 간 혁신거래 촉진 등으로 거래 협상력의 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는 전문 중개기관 운영

// 기대효과

- 중간회수시장 발달로 엔젤투자 활성화, 투자의 선순환 구조 확대
-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음
- 대기업은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시장의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음

신기술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은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략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자금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공공구매사업 중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강소기업 성장기반에 활용 가능한 사업 추진
- 주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의무비율 설정, 상용화 이전단계의 기술과 제품 우선 지원
- 공공구매 대상 기술과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치

// 기대효과

-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짐
- 제품의 개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의 토대 마련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겠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13.7%로 대기업과 국가기관에 비해 소외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자원이 열악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국가 R&D 편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20%로 확대
- 특허기술 이전 후불제 도입
 - ▶ 중소기업이 특허를 우선 이용, 상업화 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특허료 후불지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 미국의 '베이-돌법'을 한국 현실에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배양을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기반 구축, 혁신성장 유도

중소기업청이 벤처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벤처·창업 지원부처가 6개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중소기업청이 3년마다 벤처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중앙컨트롤 타워의 역할수행
- 벤처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벤처기업에 대한 활동현황 및 실태조사와 결과공표를 통해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창업·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

한국형 노키아 지원 정책을 통해 우수한 기술과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대기업과 부실기업 합병 과정 등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우수인력이 유출되고 사장되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이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한국형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밀' 설립
 - ▶ 중기청 산하 관련기관 설립으로 담당기관이 대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기술의 이전 및 관리를 맡음
-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중심의 기술 지원
- 기업이 기술과 인력을 해당기관에 이전하거나 독립 중소기업으로 분사할 경우 동 사업의 지원(펀드 및 사업화 지원) 대상에 포함

// 기대효과

- 대기업의 사업 재편 등으로 인한 우수기술 및 인력손실 최소화
- 중소기업을 통해 기술 및 인력이 재활용될 수 있는 기회 제공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기술개발비용 절감 및 상용화 가능성 확대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산업인력 불균형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전문연구요원제도 유지)
-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 ▶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인문계 졸업자, 사회복무요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희망자를 선발
 - ▶ 일정 기준을 충족(기업의 최소 6개월 구인활동)하는 중소기업청 인증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간 근속하고, 대체복무를 인정받음
 - ▶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하에서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사회 보험료의 일종인 '사회복무세'를 24개월 납부하고, 이 재원을 현역으로 입영한 사병의 봉급 인상분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청년층과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효과(사회복무요원 감소 분)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련공 양성
-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유도

// 실천과제 2. 제값받기

납품단가 연동제로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납품해야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 시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함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을 납품단가 문제 등으로 확대하여 납품단가연동제의 이행력을 확보함
- 하도급법상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관련 조항 개선

// 기대효과

- 하도급업체 경영개선과 가계의 소비여력 증가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공동제품을 개발하면 우선구매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높은 판로지원과 체계적인 규모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소기업이 공동(컨소시엄 또는 협업)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함

// 기대효과

- 동일업종 내 기술공유 및 노하우 응집을 통한 품질향상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정책과 사업들이 분산되어 있고 통합적인 지원이 어려워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맞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개선방안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 글로벌 기술 지원센터 설치, 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 확대, KOTRA를 중소기업 수출 전문지원기관으로 개편, 마스터 플랜 마련
- 민간 해외마케팅 경험자 중심의 운영과 해외진출 대행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험을 분담함

// 기대효과

- 역량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 글로벌 강소기업의 종합적인 육성체계 마련

실천과제 3. 갑질방지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고가 양극화됨에 따라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여 공동이익을 극대화 하는 계약모델 적용
- 성과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이익공유제도를 제도화하고, 세법을 개정하여 이익공유제 도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참여유도
-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협력업체로 흘러가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체계 마련

// 기대효과

-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완화
-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피해자(납품업체, 기업소모성자재(MRO)등)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하도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확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업체(피해자)가 타 조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함
-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입찰 종료 후 예정가격과 최저가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하도급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

실천과제 4. 패자부활

벤처창업자의 2차 납세 면제와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창업기업의 패자부활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 실패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
- 「조세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
-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추진
 - ▶ 재창업·창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보조, 용자, 보증 등의 재원지원에 대해 차별받지 않도록 금지

// 기대효과

- 신생기업의 패자부활을 제도화하여 창업과 재창업을 활성화
- 재도전기회를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창업에 기여



02장

자영업자·서민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실천과제 1. 활기찬 자영업자 ◦

실천과제 2. 서민권익 강화 ◦

02장. 자영업자·서민

서민권익을 회복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실천과제 1. 활기찬 자영업자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서울은 4억 원)에 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보호절차도 미흡합니다.

// 개선방안

- 환산보증금기준을 폐지하고, 〈상가 공정임대차 조정위원회〉 설치
 - ▶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기준지수를 개발하여 활용
- 계약갱신청구권 대상기한(현행 5년), 임대료상승률 상한(현행 연9%) 등을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임대료 폭등을 방지하고, 임차인 영업 및 생계 안정화 도모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로 자영업 부채 위험을 줄여가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 개선방안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함
-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 담당

// 기대효과

-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부채위험 경감

지역민방위대를 폐지하여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형식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여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민방위대 폐지
- 직장민방위대는 존치

// 기대효과

- 소규모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편의성 제고

/// 실천과제 2. 서민권의 강화

개미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각종 불법 및 편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여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상법」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 도입
- 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제도 폐지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수시공시사항 허위공시와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포함
-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행위 및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가 집단피해가 있는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파산 시 투자자 보호
- 불법 및 편법적인 사익추구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도록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 기대효과

- 대기업의 정도경영 강화
- 소비자 권리 강화

이사할 때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전월세든 자가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방안

- 제도금융권에서 기간불일치 주택자금(전월세보증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대출기관(은행, 저축은행 등)과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확대하고,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이 제휴하여 전세권 등기 등이 없더라도 보증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기대효과

- 기간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문제 개선을 통해 서민불편 해소
- 저금리시대에 제도개선을 통해 대출기관 및 보증보험이 주택자금 관련 신규 상품개발 촉진



03장

정치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실천과제 1. 공정한 정치 ○

실천과제 2. 투명한 정치 ○

03장. 정치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실천과제 1. 공정한 정치

정치인 낙하산 임명을 금지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하고 있으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의 보은성 인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정당의 지역위원장, 공직선거 공천신청자 및 낙선거,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는 사임 후 3년 이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기대효과

-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금지하여 공공기관의 중립적이고 효율적 운영 도모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직접민주제의 요소는 국회 차원에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의 가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국민발안 국회심의제’ 도입
- 국회의원의 소환은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1/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국민에 의해 파면토록 함

// 기대효과

- 책임정치 강화
- 정치혁신 추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 등의 조직에서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집행 역할 담당
-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은 월권이므로 삭제
- 국정원에 부여된 대테러 조사권은 조사참여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향파악권으로 축소
- 영장 없이 전화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원상복구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함

// 기대효과

-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남용 방지 및 국민의 인권 보호

실천과제 2. 투명한 정치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정치혁신의 출발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그 사용처와 사용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회계 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게 함
- 정당 및 국회의원의 회계보고(후원금 사용내역)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시 국고보조금 5배 삭감 등 벌칙조항을 강화
- 국회의원이 주요 선거 시 한도 2배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조항 삭제

// 기대효과

-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함



04장

복지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의료비 부담 완화 ○
- 실천과제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실천과제 3. 인구 5천만 프로젝트 ○

04장. 복지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실천과제 1. 의료비 부담 완화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부담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 ▶ 비급여 관리, 부당청구 관리,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국민의료비위원회 설치 등

// 기대효과

-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으로 합리적 발전 도모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보수)과 지역(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혁신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징수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강화

// 기대효과

- 국민건강보험료 불공정성 해소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간호·간병서비스제도를 조기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으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모형개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 기대효과

-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의 질 개선
- 입원일수 및 의료비 감소
- 간호·간병인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믿고 찾을 수 있는 질 좋은 공공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기관수 기준 5.6%, 병상수 기준 9.6%)이 매우 낮습니다.

// 개선방안

- 공공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 확충
- 주민건강센터 설치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예방중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수명 증가

// 실천과제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사회보장카드로 복지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복지 전달체계를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혁신하여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보 공유 및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등(고용안정센터,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통합 전산망 구축 및 사회보장카드 발급(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전 국민이 어느 곳을 방문하든지 고용보험(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취업정보,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적 운영

국민연금 구조개혁으로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적용제외 제도로 인해 실제 가입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구조개혁
- 가입자 구조 단순화, 경력단절여성 제도권 흡수(추후납부제도 허용범위 확대)

// 기대효과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등으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출산, 군 복무 등 단지 2개 종류에 대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크레딧 종류와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첫째아이부터 적용, 인정기간 확대)
- 출산은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 성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노동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확대
-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
- 실업크레딧 도입

// 기대효과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실천과제 3. 인구 5천만 프로젝트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의 눈치를 보는데, 마음 편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아빠(배우자 출산휴가)휴가는 2주로 확대
- 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 ▶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육아휴직급여 40%에서 50%로 인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기대효과

- 육아에 대한 역할분담 환경 조성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 저출산 해소

산모 전담간호사가 임신·출산과 육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사전에 파악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 활용)
 - ▶ 월 1회 전담간호사가 건강 체크,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 ▶ 출산 후 아기 백신주사 접종시기 관리
- 만 3세까지 전담 간호사가 각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상태 확인

// 기대효과

- 임신·출산·양육에 정보 제공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
- 아동학대 가능성 사전 예방

아이와 함께라면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사회와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5세 미만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요금 무료

// 기대효과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큼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 원칙)
-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 방문 아이돌보미 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 기대효과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로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 저출산 해소



05장

어르신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천과제 1.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

실천과제 2. 건강한 어르신 ○

실천과제 3. 삶이 편한 어르신 ○

05장. 어르신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실천과제 1.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기초연금 안 깎고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201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8만여 명과 국민연금 수급자 28만여 명 감액 폐지(소요 재정 8500억)
- 어르신 1인당 노인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향후 5년 동안 3% 증가율 유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노인가구의 주거비, 광열비 등 지출비중이 높은 항목 지원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준 고령자,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포함된 노인빈곤 제로를 위한 로드맵 마련
- 어르신빈곤제로를 목표로, 공적·사적 연금별 실질소득대체율의 기간별 목표, 정부 지원 방안, 고용정책 등이 포함된 “생애주기별 노후소득준비 프로그램” 마련

// 기대효과

- 어르신빈곤 제로 시대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하여 로드맵 수립으로 실천력 담보
- 어르신빈곤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혜택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장기 요양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 개선방안

-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 ▶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확대(복지부 사업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대폭 감소
 - ▶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 기대효과

- 어르신의 건강기능 호전으로 노후불안 해소
- 어르신 요양가정의 부양부담(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은 든든한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10명 중 6명(62%)의 어르신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 ▶ 2016년 29.8만개에서 2020년 60만개로 단계적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수당 2배 확대
 -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 어르신 일자리 기간 12개월로 확대

// 기대효과

- 어르신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로 경제적 보탬 뿐만 아니라 건강유지(의료비 절감) 효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 ▶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선도 기업에 대한 지원
 - ▶ 노인생산물 인증 및 판매촉진, 우선구매

// 기대효과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실천과제 2. 건강한 어르신

건강100세 운동교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활기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전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100세 운동교실 보급
 - ▶ 어르신 신체기능 저하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 식습관 등 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 제공

// 기대효과

- 어르신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 사회적 비용 절감
 - ▶ 어르신 운동프로그램 저변 확대
 - ▶ 사업효과 분석 결과 상완근력 13.5%, 하지근력 17.1%, 평형성 25.9%, 우울정도 31.6% 개선
 - ▶ 1인당 의료비도 연간 15만7천원 절감

고령친화형 실버특구를 조성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기존 복지제도와 새로운 지원방식을 연계한 종합적 복지지원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고령친화형 실버특구 조성
 - ▶ 슈퍼 고령지역(65세 이상 30% 초과) 20개 선정
 - ▶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 교부
 - ▶ 지방자치단체 중심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체 구축

믿고 찾으실 수 있는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어르신들의 수요와 대기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요양시설은 2.2%에 불과하여 대기자가 많고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
 - ▶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직영 요양시설 확충
 -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 공공 요양시설(Nursing Home) 운영

// 기대효과

-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로 일자리 창출

/// 실천과제 3. 삶이 편한 어르신

어르신 간호·간병서비스제도를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 자식들은 간병으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모형 조속히 개발

// 기대효과

- 어르신 간병비 부담 완화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입원일수 및 의료비 감소)
-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경로당을 쉐어하우스(Share House)로 바꿔 홀몸 어르신들의 친구를 만들어드립니다.

홀몸 어르신 138만명 중 보호가 필요한 약 60만 명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와 경제난, 이웃과의 관계 단절, 주거 불안 등의 문제 속에서 고독사하거나 자살까지 시도하지만, 사회적 보호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안

-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하여 공동숙소로 탈바꿈
-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서비스를 받기만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도 하는 “Give&Take” 구조를 통한 참여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 Give 부모상담 프로그램 : 부모들의 양육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 ▶ Give 지역친화 프로그램 : 자투리시간 돌봄 서비스 및 택배보관, 반려동물 관리 등 지역 친화적 사업 수행
 - ▶ Take 미래설계 프로그램 : 노인 돌봄과 요양에 대한 정보, 필수사항, 어르신을 위한 강좌 제공
 - ▶ Take 문화생활 프로그램 : 동아리 활성화, 합창단, 문학카페, 연극모임 등 단체결성 지원

// 기대효과

- 홀몸 어르신들의 개별 역할 증대와 심리적 안정감 제공, 지역 공동체 복원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로 어르신과 청년이 친구가 됩니다.

청년과 어르신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만큼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조성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청년과 어르신의 경험주고받기사업
 - ▶ 지역의 대학생과 고교생(실업계)이 강사가 되어 어르신의 외국어, 컴퓨터, 식품과 영양, 안전과 건강관리 등 교육 담당
 - ▶ 청년기 학생들의 강사경험, 세대 간 교류경험을 통한 세대별 사회구성원 협력문화 조성
 - ▶ 청년의 일자리 경력을 쌓아주고, 어르신은 교육서비스를 받음

// 기대효과

- 세대 간 취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인력고용효과 유도
- 세대별 사회구성원 협력문화 조성 및 세대갈등 해소



06장



- 실천과제 1. 청년일자리 지원 ○
- 실천과제 2. 청년학비 경감 ○
- 실천과제 3. 청년권익 보호 ○

06장. 청년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실천과제 1. 청년일자리 지원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8.3개월로, 고용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취업 준비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 ▶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 지급
 - ▶ 수급대상자는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중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
 - ▶ 수급자들은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함 (2.5%, 후납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
 - ▶ 25세 이상 구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25~34세 우선적용)

// 기대효과

- 구직과정에서의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
- 후납식 원금상환으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노출 방지

청년스타트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여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의 경우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공공구매제도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개선
- 창업지원 심사단에 청년 기업가의 참여 확대

// 기대효과

- 청년 스타트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기회 제공
- 창업지원 심사 단계부터 청년을 위한 실질적 사업과 경영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가능

청년구직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채용과 입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면접도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채용과정에서의 계약 일괄파기 등 고용주의 갑질로 인해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 인권보장관련 조항 신설
 - ▶ 채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 수집 금지, 수집 시 수집사유 명기
 - ▶ 채용과정 중 인신공격, 성 차별적 질문, 언어폭력 금지
 - ▶ 채용완료 전 정직원에게 준하는 업무강요 금지
 - ▶ 면접비 지급 의무화
 - ▶ 채용합격과 탈락에 대한 소명서 공개
- 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채용지원 시점으로부터 약속된 각종 구두계약, 서면계약에 대한 준수 의무 강화

// 기대효과

- 기업의 후진적인 채용풍토를 개선하고 구직자들의 기본인권 보장
- 구직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고 취업의지 고양

최저임금 위반과 직무교육을 빙자한 청년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PC방 등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의 현장실습생과 직업체험형 인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이 전무합니다.

// 개선방안

- 고용주 의무교육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포함
- 대학 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 인턴 등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지방노동청 산하 근로감독관이 위반사례 적발 시 합의를 유도하되,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 기대효과

- 미흡한 사회안전망의 보완책인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고 부당한 피해사례 방지
- 빈곤퇴치와 소득 불평등 완화

실천과제 2. 청년학비 경감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경제위기, 부채증가로 학자금을 갚아가는 데 더욱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언제든지 신용불량자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하향조정

// 기대효과

- 청년부채의 부담으로 결혼·출산·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
-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부담을 줄여 빠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학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신입생에게 부과하고 있는 입학금은 산정기준이 없거나 사용처가 모호하여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고등교육법」 개정
 - ▶ 고등교육법 11조 개정을 통한 입학금 폐지
- 대학 예산운용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대학,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 기대효과

- 대학생 신입생 및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 실질적 등록금 인하 실현

국가장학금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제도를 비롯한 각종 교·내외 장학금은 청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제신청제도 운영
- 소득분위산정법의 개선책 강구
 - ▶ 서민층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 각종 금융소득 환산 시 산정이율을 실제 시중금리로 적용
- 교내·외 장학금 제도 변경 시 학생대표와 관련내용을 반드시 협의 후 결정, 변경 3개월 전 정보공개 및 사전고지

// 기대효과

- 장학금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
- 국가장학금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정한 수혜가 가능하도록 분배

/// 실천과제 3. 청년권익 보호

정당은 청년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각종 비용부담과 진입장벽이 높아 참여가 쉽지 않고, 정당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정치자금법」 제28조 개정을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의 10%를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
- 사용금 중 일정 금액을 청년 정치 참여기금으로 조성 지급

// 기대효과

- 청년정치활동 지원확대를 통한 청년 정치교육 활성화 및 정치참여 촉진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해마다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관련 정책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 개선방안

- 범정부 차원의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설치
 - ▶ 청년의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청년 공간 마련 등 청년 권익증진과 권리보호
-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문제를 한 번에 접근, 해결할 수 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 기대효과

- 청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청년 사회안전망 마련
- 도시재생, 사회경제, 공동체회복 등 청년들의 능동적인 역할 강화

청년연령을 조정하여 불이익을 없애겠습니다.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청년연령 정의 규정을 34세로 상향조정

// 기대효과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세대인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
 - ▶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 ▶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

// 기대효과

- 청년세대에게 저가의 임대주택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 만혼 및 비혼 감소로 출산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 기대



07장

노동·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실천과제 1. 비정규직 권익 보호 ○

실천과제 2. 일자리 창출 ○

07장. 노동·일자리

좋은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실천과제 1. 비정규직 권익 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90% 근로자들을 위해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700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조직화되지 않은 90%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회의소' 설립
 - ▶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대칭되는 '노동회의소' 설립
 - ▶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중앙조직 및 시·도, 지역 단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단체가 아닌 자발적인 기구로 육성
 - ▶ 주요 기능은 근로자 권익대변, 입법청원, 법률서비스, 정책개발 및 연구, 교육,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임
 - ▶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비조직화 된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
-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 노동조합과 상호 보완하는 조직

비정규직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비 60%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 개선방안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용자(파견 및 용역의 경우 근무사업장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 해당자
 - ▶ 현재 직장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 ▶ 300인 이상 사업장

// 기대효과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8.3%)
 - ▶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3.035% + 0.2%), 고용보험료(0.65%) 사업주 부담

계약직근로자 남용을 막겠습니다.

기간제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약직 근로자는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어 계약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 개선방안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대체인력 6개월간 채용 금지
- 이를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업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고용 의무 적용

// 기대효과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근로자 확산 방지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을 방지하겠습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 파견근로자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불법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하도급법」 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인사와 노무관리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여 고용관계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도록 개정

// 기대효과

- 불법사내하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사내하청 및 불법파견 등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

파견사업자의 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자 등이 취하는 수수료로 인해 임금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공공기관의 파견근로사업 근거를 신설하여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파견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경우 최소의 행정비용만으로 파견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불법파견 방지 등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약 22%가 감정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감정노동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심해지고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건강권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 개선방안

-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및 처벌 강화
- 근로자감정지원 프로그램(EAP) 활성화
- 감정 치유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 감정근로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 감정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광고 확대

// 기대효과

-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및 치유
-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받아드리겠습니다.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 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시 하도급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지급「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개정)

// 기대효과

- 원사업자의 법정관리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피해 최소화

/// 실천과제 2.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각종 일자리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개선방안

-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
 - ▶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5조 1항 개정
-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기업으로 확대도입
 - ▶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2항 신설
 - ▶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순차적 적용
- 미이행률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 부과
 - ▶ 청년고용부담금은 고용보험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사업에 활용

// 기대효과

-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년 5만 5천명 청년고용 효과
-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8만 3천명 고용 효과

공정임금을 도입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 개선방안

- 「공정임금법」 제정
- 성별 등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 공정임금을 위한 임금정보 공개 요구권 도입
- 임금차별 입증책임 사용자에게 부과
- 정부발주 공사에 대한 적정임금 도입

// 기대효과

- 임금차별 해소
- 취약계층 보호

육아휴직근로 편하게 쓰십시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주변 동료들이 해당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들이 심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 정부 지원

// 기대효과

- 육아휴직 신청자들의 권익 보호
- 육아와 보육제도 개선으로 저출산 문제 완화



08장

교육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 실천과제 1. 공교육 정상화 ○
- 실천과제 2. 사회적 약자의 기회확대 ○
- 실천과제 3. 창의교육 실현 ○
- 실천과제 4.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

08장. 교육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 실천과제 1.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시모집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시전형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 파행 및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수시전형 모집 인원 대폭 제한
 - ▶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비중 대폭 축소
- 진로개척자전형 확대
 - ▶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자가 동일과정 학과 진학 시 배려하는 제도

// 기대효과

-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정부의 초·중학교 과정 완전 의무교육 실시 선언 이후에도 의무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수업료 외에 기본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등 일체 지원
- 교복비, 교통비 등 사적 비용 일부 보조
- 2020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돌봄 교실 이용률을 전체 학생의 50% 수준까지 확대
 - ▶ (2015) 24만 명 → (2019) 29만 명 → (2020) 34만 명

// 기대효과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교육격차의 해소를 통한 교육기회의 공정성 확대

// 실천과제 2. 사회적 약자의 기회확대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차별과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기회균등선발을 20%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학 입학 시 지역균형선발, 계층균형선발 강화
- 내신 상위 10% 학생에게 해당 시·도 국·공립대 무시험 진학 기회 보장
- 입학 전형 지원 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 자료 제출 금지 등 간소화

// 기대효과

- 계층별,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 교육기회균등 실현으로 사회통합 실현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대학등록금 비중이 OECD회원국 최고 수준입니다.

// 개선방안

-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 국·공립대학이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지방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서울의 명문 사립대와 경쟁체제 유도로 전체적으로 대학별 경쟁률 평준화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 유도

// 실천과제 3. 창의교육 실현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를 도입하여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0년이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교육은 산업화시대의 교육체계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초·중·고등 공립 창의학교 도입(17개 시·도 시범운영)
 - ▶ 자체 교육과정 개발 허용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 지원
- 공립형 대안학교 도입(17개 시·도 시범운영)
- 재가교육과 사이버고등학교를 연계한 자율교육제도 도입

// 기대효과

-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 자기 능력개발과 직업과 진로를 통한 미래의 자아실현 가능
- 미래 시대에 적합한 창의 교육체계 구축의 시발점
- 교육의 사회적 가치창출 제고

진로·진학·취업종합포털(Life Mentor Studio)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인력 부족으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선택 관련 정보가 형식적이고 대학진학 위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Life Mentor Studio” 구축
 - ▶ 직업별 현황, 학습체계, 훈련기관, 관련대학, 채용기관, 준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체계 구축
 - ▶ 국내 대학 종합 비교정보망 구축
 - ▶ 진로 및 직업상담 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배치와 전문가 양성

// 기대효과

- 청소년시기부터 정확한 진로 및 직업 관련 정보 획득
- 종합적인 정보망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미래 설계

// 실천과제 4.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방지하겠습니다.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최근에는 사이버 따돌림 확산으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
- 학교 내 사이버 따돌림 대응센터 설치
 - ▶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강화

// 기대효과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 청소년의 심리적 불안 해소 및 자살 예방
- 학교안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남·녀교사의 구성비를 맞추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 심화로 도시지역 여교사 편중이 심화되어 균형잡힌 교육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교원 배치 시 학교별 남·녀교사 최저 성비 30%로 규정
- 초빙교사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 성비를 고려한 채용 확대, 남성교사 확보

// 기대효과

-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및 교내외 생활지도 분야에서 여교사의 역량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교육 불평등 완화
- 교원의 남·녀 성비 편중 심화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성평등 인식 왜곡 방지

학교장 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민주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장 임명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학교공동체 구성원 중 교사와 학부모 1/3이상이 서명할 경우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구
-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학교의 교장을 보직 해임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학교장의 일방적·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편의주의적 교육행정제도 개선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용증가에 따른 서비스제공 공간도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방과 후 교장제 도입 및 방과 후 종합 지원센터 설치
 - ▶ 방과 후 교장은 교육장이 임명
-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확대
- 학교 내에 구역별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학습동아리·강사양성·재능 나눔 프로그램 등 운영

// 기대효과

-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세대복합형 지역공동체 복원
-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 및 청소년 활동 공간 제공 및 보호
- 모든 계층에서 누구나 평생학습이 가능하고 노년과 근로 취약계층에게 친화적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지원



09장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당당히 일하는 여성 ○
- 실천과제 2. 당당히 맞서는 여성 ○
- 실천과제 3. 당당히 누리는 여성 ○
- 실천과제 4. 장애인이 자립하는 사회 ○

09장.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실천과제 1. 당당히 일하는 여성

여성감정노동자들의 기를 살려드리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감정노동에 대한 기업의 통제가 심해지고 여성감정노동자들의 인권, 건강권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 개선방안

-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및 처벌 강화
-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
-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 및 산재인정 범위 확대
- 감정근로업무 담당자 순환배치 활성화
- 감정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광고 확대

// 기대효과

- 감정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및 치유
- 감정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출산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이나 출산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육아휴직 시 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방안

- 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급여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 출산여성근로자들의 출산동기 제고
- 육아휴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곤란 개선을 통해 공동육아문화 정착

경력단절 여성들이 쉽게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재취업 지원정책으로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를 타개할 수 없고, 기껏해야 임시직 일자리 재취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2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고용정책에 중점을 두고, 현행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 강화
-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과 창업 등에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같은 전달체계 사업을 강화하고 내실화 함
- 노동권과 노동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개정함
- 창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 기대효과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시간제 일자리를 주변적 일자리로 간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여건 강화

남녀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은 근로현장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양육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여성친화기업 확대를 위해 법정 노동 시간 준수제를 강화하도록 개정
- 노동시간 준수와 임금차별에 대한 노동현장의 현실적인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강화를 통한 상벌 체계 실현
- 돌봄 노동자의 경력인정 기준마련 및 처우개선책 마련

// 기대효과

-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강화
- 여성친화적 노동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실천과제 2. 당당히 맞서는 여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후유증이 남고 주변인들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가족, 연인관계) 내의 물리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아동의 물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사·의료진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예방 교육 의무화
-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를 개정하여 신고자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첨부 및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함
- 「가정폭력전과공개법」 추진
 - ▶ 전과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정보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 및 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한 신중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 대상이 연인관계일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개선방안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편력이 논의될 경우 재판장이 이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의 무조항 신설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측이 고소인의 사건 외 성적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 강화
 - ▶ 연인이더라도 폭행, 협박 등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로 인정

// 기대효과

- 2차 피해를 막고 여성의 성범죄 피해보호 강화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및 촬영물 유포협박이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 개선방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개정
 - ▶ 공공시설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촬영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 ▶ 유포협박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와 사이트 폐쇄
 - ▶ 몰래카메라 범죄 촬영물 유포협박을 받는 경우 피해자 영상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영상물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로 2차 범죄피해 차단
-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통사이트에 대한 국내외 법적 대응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여성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 2차 범죄피해를 차단하고 영상물 유포협박 근절

/// 실천과제 3. 당당히 누리는 여성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혜택이 적습니다.

// 개선방안

-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 ▶ 출산은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장려하는 인센티브 성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노동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확대
-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크레딧 인정기간도 확대

// 기대효과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국민연금 단절 예방
- 여성취약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산모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산모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안한 산모들이 많고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을 활용)
 - ▶ 월 1회 전담간호사가 건강을 체크
 -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 ▶ 출산 후 아기 백신주사 접종시기 관리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상담·보호시설 확충
- 만3세까지 전담 간호사가 각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상태 확인

// 기대효과

-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
- 저출산 해소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안정된 여건에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양육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양육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개선방안

- 한부모 가정 초기지원과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부모지원센터의 기능강화
 - ▶ 긴급양육비 지원예산 증액
 - ▶ 한부모 가정에 대한 상담, 인력, 네트워크 공유 및 지원 우선적용
 -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한부모의 양육지원
- 양육비 지원을 통한 한부모 여성과 자녀 실질적 지원

실천과제 4. 장애인이 자립하는 사회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2014년)로 비장애인 6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 실업률(6.6%)은 전체 실업률(3.6%)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62만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223만원)의 73% 수준에 불과합니다.

// 개선방안

-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 ▶ 장애인연금 중 소득보전 급여인 '기초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및 지급대상 확대
 - ▶ 장애수당 20% 인상
-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취업 시 자격 1년 유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 민간기업 2.7%에서 3.5%, 정부기관 3%에서 5%로 확대하고, 의무고용 중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개선
-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소득보장) 확대
-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도가니사건(광주 인화학원) 및 신안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권리보호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 개선방안

- 염전노예법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 법제화

//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비인간적인 인권침해 사건 예방
-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 및 보호시스템 구축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이 사회통합입니다.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 36.7%, 놀림 등 언어폭력 24%, 교육기회 차별 12.5% 등 교육현장에서 차별이 심하지만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이 61.1%에 불과합니다.

// 개선방안

- 통합교육의 실효성 제고
 - ▶ 특수교사 정원 충원
 - ▶ 일반교사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의 역할 설정

// 기대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사회 구현
-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으로 차별 없는 교육 구현

장애인 이동권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은 저조합니다.

// 개선방안

- 시내버스(고속버스, 마을버스)의 대폐차 및 신규도입 시 저상버스 도입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광역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에 대한 복지축소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명목으로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복지축소 중단

// 기대효과

- 장애인의 복지권리 축소 중단으로 권리 강화



10장

안전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안전한 먹거리 ○
- 실천과제 2.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
- 실천과제 3. 안전한 환경 ○

10장. 안전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안전한 먹거리

‘식품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분쟁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식품피해구제위원회 신설
- 식품피해구제기금 신설
- 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배상
- 정부기관은 피해를 유발시킨 기업에 보상 청구

// 기대효과

- 일반인과 기업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정부기관이 중재 역할 수행
- 신속한 분쟁 해결과 보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식품위생법을 강화하고 불법식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처벌규정 강화
-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시 업계에서 퇴출
- 타인의 명의를 빌릴 경우 처벌 강화
- 단속기관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시 인센티브 제공

// 기대효과

- 불량식품 단속 실효성 확보
- 국민건강 개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값비싼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2차 정수할 수 있도록 구역별 '재정수처리시스템' 도입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확대하고 가계수입, 급수관 노후도를 고려해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국고지원

// 기대효과

- 안전한 물 공급
- 취약계층의 물 복지 향상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산 수산물과 방사능 위험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자율적으로 실시중인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
- 국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수산물 1품목을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우선 시행 후 사업 효과를 바탕으로 타 품목으로 확산
- 장기적으로 EU나 미국의 이력추적관리제도(2005년부터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해 의무실시)로 발전
- 중국 불법조업어선 단속을 통해 징수하는 담보금을 현행 국고에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관련 재원 확보

// 기대효과

- 국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 국내 수산업 발전 도모

// 실천과제 2.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화상경마, 화상경륜, 화상경정 신규진입을 막겠습니다.

사행 사업의 장외 발매소 운영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한탕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중심 상업지구와 준공업지역 외에는 장외 발매소의 신규설치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 사행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지역주민과의 마찰 최소화
- 미래세대의 사행산업 접근 차단

지자체가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과 고양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물 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 확대 및 민간위탁기관 지원·관리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및 의료진 확충

// 기대효과

-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동물권 보호

‘일상생활지원센터’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도 복원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일상생활지원센터 설치(「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 대행서비스: 통합택배, 간단한 심부름, 각종 검사 대행 등
 - ▶ 가정서비스: 공구 도서관, 똑똑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텃밭가꾸기 등
 - ▶ 보호 및 안내서비스: 일시 보육서비스, 아동·노인 에스코트, 통역 등
 - ▶ 교육서비스: 서예, 한자, 독서, 이야기교실 등

// 기대효과

- 인근의 어르신 등을 고용하여 대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를 통해 주민 간 교류 확대
-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 부활
- 신규 일자리를 창출

/// 실천과제 3. 안전한 환경

초미세먼지를 잘 관리하여 맑은 공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흡입 시 천식·폐질환 유병률,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서해안남부지역, 휴전선지역, 백령도지역 등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경로에 초미세먼지(PM2.5미만)를 관측할 수 있는 별도의 관측망 신규 확충
-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야외 근무 근로자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허용
- 한-중간 대기분야 환경협력 강화 추진
- 대형직화구이 음식점 대상 초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 가정용 저 녹스(NOx) 보일러 보급 추진

// 기대효과

- 미세먼지 관측기능 강화를 통한 예보능력 강화
- 미세먼지 취약 근로자 보호
- 미세먼지 발생 요인 억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

환경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선방안

- 환경피해구제기금 신설
-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배상
- 정부기관은 피해를 유발시킨 기업에 보상 청구

// 기대효과

-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 가능
- 일반인과 기업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정부기관이 중재 역할 수행

택시 연비 개선을 통해 맑은 공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의 연비는 대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차량의 연비 개선은 미미하여 자원의 낭비 및 택시비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LPG엔진 튜닝 추진
- 엔진성능 확장 추진
 - ▶ 작고 가벼운 엔진으로 연비 향상
- 장기적으로 LPG하이브리드로 대체 추진

// 기대효과

- 에너지 절약 및 택시운송원가 절감
- 원가절감을 통한 택시산업 근로자 처우개선

11장

실천과제 1. 도시와 농촌의 상생 ○

실천과제 2. 농·수·축산업인의 복지 강화 ○

11장. 농림수산물축산업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도시와 농촌의 상생

쌀을 지켜내겠습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소비 부족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고품종 쌀 개발과 보급으로 소비 촉진
- 2차가공산업 지원으로 국내 쌀 소비 촉진, 해외 판로 개척
- 정부 공공 비축 확대
- 농협 수매 물량 확대
- 묵은 쌀 가공업 지원
- 농협 수매시 매입가 편차 축소

// 기대효과

- 쌀값 안정을 통한 농민 보호
- 식량안보 차원의 농업대책 수립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책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농업 종합자금, 농축산 경영자금, 영어자금,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등 모든 농·어업 정책 자금 금리를 1.5%로 인하

// 기대효과

-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자금 실현
-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품목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이른바 5대 노지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가격은 기상, 수급,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2017년부터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각 지역별 생산 면적 할당
- 할당제를 준수하는 생산자에 인센티브 지급
- 할당제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 2020년까지 제도 안착

// 기대효과

- 계획적 생산량 관리로 수급 안정 추구
- 과잉 생산과 수급 불안정 해소로 농산물 가격 급등과 폭락 문제 해소
- 생산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여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농·수·축산업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국가정책으로 인한 산업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포함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 공유이익을 농·수산업 인프라개선에 투자

// 기대효과

- FTA 확대에 인한 농·수산업분야 피해 최소화
- 농·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경쟁력 확보

수산업 보호를 위해 수산직불제를 개선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 농업직불제는 1조5천억원인 반면 수산직불제 총액은 200억원 수준으로 1.34%에 불과합니다.

// 개선방안

- 친환경 양식 직불제의 도입
- 일정 기준의 어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수입보장보험 도입
- 은퇴양식어가 및 전업양식어가의 소득지원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
- 현행 50만원인 수산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80만원으로 인상

// 기대효과

- 농업직불금과 수산업직불금 격차 해소
- 수산업종사자들의 안정적 수익 지원

/// 실천과제 2. 농·수·축산업인의 복지 강화

어선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4톤 이상 보험의무가입제도로는 소형어선 선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보험의무가입 대상을 3톤 이상으로 확대

// 기대효과

- 소형 영세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권익 향상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이 농·어촌에 정착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시·군·구 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민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제도 강화
-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복지사 전담제 도입

// 기대효과

- 결혼이민자의 농촌정착 지원
-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정의 지역공동체 동화 촉진



12장

실천과제 1. 언론의 공정성 확보 ◉

실천과제 2. 미디어 복지시대 ◉

12장. 방송·통신

공정 언론과 미디어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언론의 공정성 확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후보 이사회에 추천
- 대통령 선거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는 후보 추천 금지
- 사장 선임시 이사회의 의결방식에 특별다수제 도입(이사진 2/3 이상의 찬성)
-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도입

// 기대효과

- 공영방송의 자율성 확보
- 방송의 공정성 확보

/// 실천과제 2. 미디어 복지시대

미디어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미디어 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 정보격차가 사회계층간 격차로 확대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부족합니다.

// 개선방안

-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보지 않을 권리' 강화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 미디어 교육을 통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힐링 프로그램' 구축 및 제공
- 지역, 계층, 취향 등을 고려한 소출력의 공동체 방송 확대

// 기대효과

- 디지털미디어 격차해소 및 이용자 복지 증진
- 방송의 다양성 구현

공정하고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장지배적 유통사업자가 생태계를 지배하는 낙후된 방송통신시장에서 콘텐츠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실화
-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개선
- 콘텐츠분야 비정규직 인력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기대효과

- 이용자가 서비스와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체계 확립

‘망 중립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망 사업자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 망 중립성이 훼손되고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저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미디어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방송, 통신, 제조사, 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 기대효과

- ‘망중립성’ 강화
- 이용자의 권익 증진

농어촌의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및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농어촌의 인터넷 요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터넷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 미사용 TV주파수대역(TV White Space)을 활용하여 저비용 무선데이터 송수신
- 관광객들에게 공공 WiFi를 통한 관광 명소 및 여행관련 정보 제공
-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마을방송 및 방범카메라 설치
-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 저비용으로 산간오지 및 농어촌 IT 정보격차 해소
-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 미사용 주파수대역 관련 신사업 활성화로 중소 제조업체 성장

국민의당 공약 예산 추계

소요예산 및 기본방향

- ◎ 국민의당의 주요 공약 소요예산은 5년간(2017~2021) 46조 2500억원
(이 중 3.5조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
 - ▶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예산 추계에서 제외
 - ▶ 추가 재원은 SOC 등 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자원 일부는 국가R&D 재원조정)
 - ▶ 복지 예산 : 5년간 매년 예산의 3% 증액
 - ▶ 건강보험재정 3.5조 활용
 - ▶ 증세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 후 추진
- ◎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국민연금은 소모성이 아닌 투자성 재원으로 전체 소요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음
- ◎ 자원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역점을 두었음

비용추계 및 조달방안

주요사업	5년간 추계	년간 추계	비 고
한국형 노키아 자원정책	2500억	500억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1조	2000억	
공공보건의로 확충	1조	2000억	
한국형 사회복지카드	3000억	600억	
산모전담간호사제	5000억	1000억	
아이 부모 무료대중교통	3500억	700억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예산	12.5조	2조 5000억	
기초연금	4조 2500억	8500억	
노인일자리 창출	4조	8000억	
간병서비스 확대(어르신포함)	2조 8000억(건강보험 2조)	5600억(건강보험 4000억)	건강보험재원 활용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국가재정 1조 (건강보험 1.5조)	국가재정 2000억 (건강보험 3000억)	건강보험재원 활용
경로당 쉼어하우스	3000억	600억	
후남형 청년구직수당	5000억	1000억	
초중등학교 의무교육강화	2조	4000억	
미래형 창의학교 도입	8000억	1600억	
장애인 지원	3조	6000억	
안전한 수돗물	2조	4000억	
농어업지원	5조	1조	
기타 사업	1조 2000억	2400억	
총 · 계	46조 2500억	8조 5500억 건강보험 재정소요 제외	건강보험 3.5조

국민 편 국민의당 정책공약집

2016년 3월 23일 초판 1쇄 발행

발행인 : 안철수, 천정배
편집인 : 장병완
만든이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표지디자인 : brandhotel
내지디자인 : 이의선(오늘의공상)
인쇄 및 제작 : 썬 프린팅

펴낸 곳 : 오늘의공상
출판신고 : 제 2015-000007호

ISBN 979-11-955920-2-9 (03300)

© 국민의당, 2016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 138조 2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인쇄소 : **썬프린팅**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710-2 **T. 02-782-0133**

값 5,000원

03300



9 791195 592029

ISBN 979-11-955920-2-9